

국회사 첫 논의 '불씨'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한전공대 특별법 소위 통과 왜 늦어지나 소상공인 겨냥 유통산업발전법 몰두 "관련 학과 많아"...국민의힘 반대 여전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법안통과를 위한 '불씨'는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에 몰두하면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외면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겨냥한 관련 법안과 폐업 위기에 몰린 광물자원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와 무관심도 한전공대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는 애초 26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관련 특별법 등이 쟁점 법안이었다.

실제 한전공대법은 무더기로 법안이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관련 특별법 등에 밀려 20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라 사실상 이날 관심권에서는 벗어났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관련 특별법에 관심이 쏠린 탓이다.

이날 13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안전 심의에 오른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등에 적용하던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앞다퉀 관련 법안을 내면서 관련 법안의 수도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아예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 이 같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사

로잡아야 하는 여로서는 이 법안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민주당은 9건, 국민의힘은 6건의 관련 법안을 각각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내놓았다.

5건의 유사 법안이 제출된 폐광지역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은 2025년까지 적용되지만 민주당은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기간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광물 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사는 3조 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처럼 현안 법안 처리에 여·야가 몰두하면서 한전공대법은 뒷전으로 밀렸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여전하다. 한전공대법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나주 화순) 국회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위원들을 만나 한전공대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지만 이날 야당의 협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또 "지역의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골프장 부지는 체육시설인데 기부해서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 준 것이다"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 제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행 과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2일 전남도 36개 사회단체 연합회원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2월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靑 "불안 해소 위한 문 대통령 백신 우선 접종, 마다할 이유 없다"

청와대는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여론 일각의 요구에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넘게 나와 (접종 순위)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상황 변동은 없다"며 "불신이 생기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당분간 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만 68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65세 이상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 상태인데, 현재 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접종에 우선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확산수반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백신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1호 접종자로 앞장서 맞은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백신 접종에 나서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강기정 "광주·전남·전북 거점도시 연결하자"

호남 광역교통망 온라인 토론회

H-way 중심 수소교통망 제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광주 주요기점과 전남, 전북의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H-way(수소길) 중심의 호남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호남 광역교통망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초광역권 지역균형발전 논의와 광역연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주·전남·전북 500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친환경 미래운송 수단인 수소 트램 중심으로 광주·전남·전북 거점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지역 국가철도망계획 노선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트램과 수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전북이 초광역권 차원의 통일된 노선 등 공동 대응 방안과 전략이 있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또 광주 시내 주요 공간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을 기반으로 한 H-way(수소길)를 제안했다. 그는 "광주역과 버스터미널, 야구장(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지하철 1·2호선 소외 지역을 수소 트램으로 연결하면 광주 전역에서 광주승정역으로의 균일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특히 버스터미널, 챔피언스필드,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시설을 연계한다면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대중교통 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울산, 부산, 대전, 창원 등 많은 도시에서 트램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도 그런 수소 기반 미래 교통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지난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 군민간 공방 이전 등 광주·전남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32.6% 민주당 29.5%...서울 지지율 오차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부산은 국민의힘 10.5%P 앞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6%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3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2.6%로 민주당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2.2%포인트 하

락한 29.5%였다.

두 정당의 격차는 3.1%포인트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이내에 머물렀지만, 순위는 바뀌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주일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36.1%, 민주당 지지율이 2.4%포인트 하락한 25.6%였다. 격차는 10.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0.7%포인트 상승한 31.8%, 민주당이 1.4%포인트 하락한 31.6%로 조사됐다.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0.2%포인트다. 이어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6.0%, 정의

당 4.7%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사찰 논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부 장관 갈등 노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방,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토론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공정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0.6%였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상승한 56.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3%다. 공·부정평가 차이는 15.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